

Cyber Clean Magazine 16년 3분기

# 국토사랑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차 례

1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2

만화로 익히는 청탁금지법

3

역사 속의 청렴이야기 (이원익)

4

우리 소 반부패 청렴 활동

5

청렴 선진국 수범 사례

6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사례

I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 입법의 경과

- 2015.3.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국회를 통과
- 2016. 9. 28.부터 시행

○ 법률 적용대상

- 적용 대상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적용 대상자
  - 모든 공직자 및 공직자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 공공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민간인 등
  - 일반국민(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

## ○. 부정청탁 금지행위

- 인 허가 등 업무처리
- 행정처분 .형벌부과 감경 면제
- 채용 승진 등 인사개입
- 행정지도 단속 등 결과조작
- 위법사항 묵인 등

## ○ 청탁 금지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

- 입법예고기간 2016.5.13~6.22.(40일간)
-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초과  
되면 과태료 처분
- 강연료 상한선 : 장관급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이상 30만원, 5급이하 20만원(시간당)  
초과시간 보수는 1/2로 제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및 처벌내용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부정 청탁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직자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li> </ul>	제재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직자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li> </ul>	1천만원 이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공직자 제외)</li> </ul>	2천만원 이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li> </ul>	3천만원 이하 과태료
	<p>&lt;형사처벌&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li> </ul>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 수수 금지	<p>&lt;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일인으로부터 직무관련 및 명목 여하 불문하고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li> <li>*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li> <li>*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금품등을 제공,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li> </ul>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p>&lt;1회 1백만원 이하의 경우 과태료&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li> <li>*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li> <li>*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금품등을 제공,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li> </ul>	수수금액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준초과 강의 사례금을 수수하고 신고·반환하지 않은 공직자</li> </ul>	500만원 이하 과태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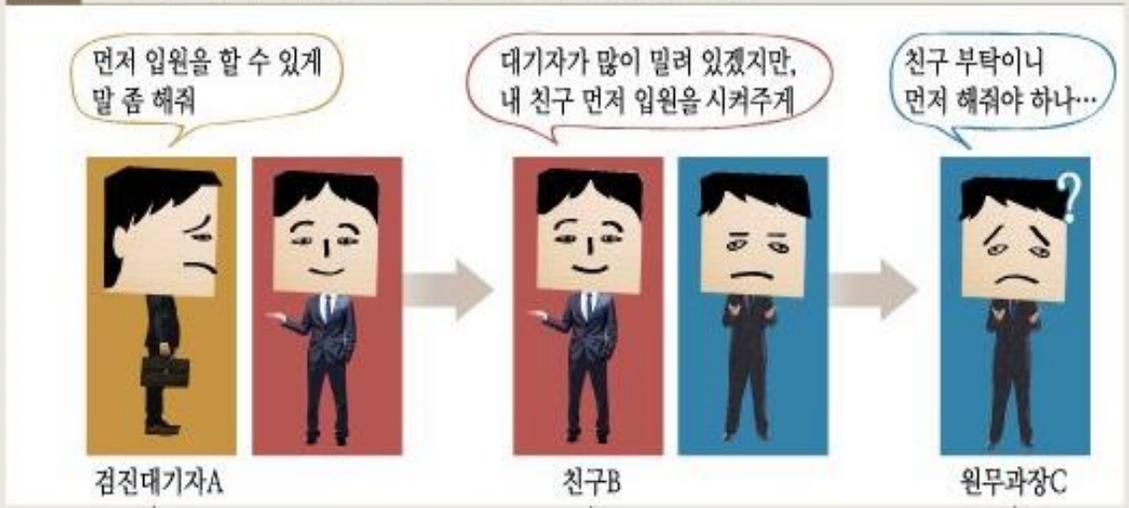
2

만화로 익히는 청탁금지법

'병원 민원' 이젠 옛말?

[청탁금지법ABC]상 부정청탁편 ①

유형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 사용에 대한 부정청탁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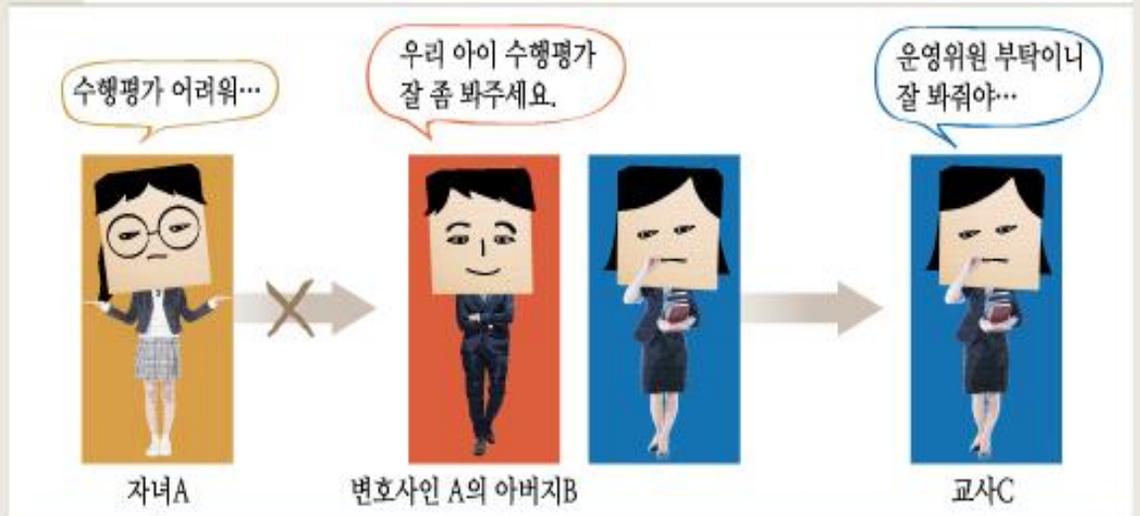
판정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청탁 들어준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본인(A)이 직접 병원(C)에 요청했다면 과태료 없음	B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 해당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C가 거절의사 명확히 한 경우 징계 및 벌칙대상 아님

변수 국공립·민간 병원 여부, 청탁 받는자(C)가 공직자 또는 교원(교수 등) 여부  
 예) 민간병원에서 교원 아닌 의료진에게 부탁하는 경우 이 법과 무관함

## "성적 올려달라" 형사처벌도 가능

[청탁금지법abc] 상)부정청탁편②

유형 학교 입학·성적·평가 관련 청탁



판정 과태료 없음

A는 B의 청탁사실 몰랐고  
직접 성적 올려달라  
부탁했어도 학생 본인은  
처벌이나 과태료 없음

2천만원 이하 과태료

B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개업  
변호사면 2천만원 이하,  
공직자라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청탁 들어준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C가 거절의사 명확히  
한 경우 징계 및  
벌칙대상 아님

변수 성적 상향조정이 교수나 교사의 재량권내에 있는 경우엔 부정청탁 아님  
예) 졸업예정자가 취업 후 학내 규정상 가능한 성적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

## 시의원에겐 청탁가능? "큰일나요"

[청탁금지법abc] 상)부정청탁편③

유형 보조금·장려금 등 배정·지원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



<p><b>판정</b> 1천만원 이하 과태료</p> <p>본인(A)이 직접 공무원(C)에 요청했다면 과태료 없음</p>	<p>공익적 목적이 아닌 특정인을 위한 특혜 ▶부정청탁에 해당</p> <p>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므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p>	<p>(청탁 들어준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p> <p>C가 거절의사 명확히 한 경우 징계 및 벌칙대상 아님</p>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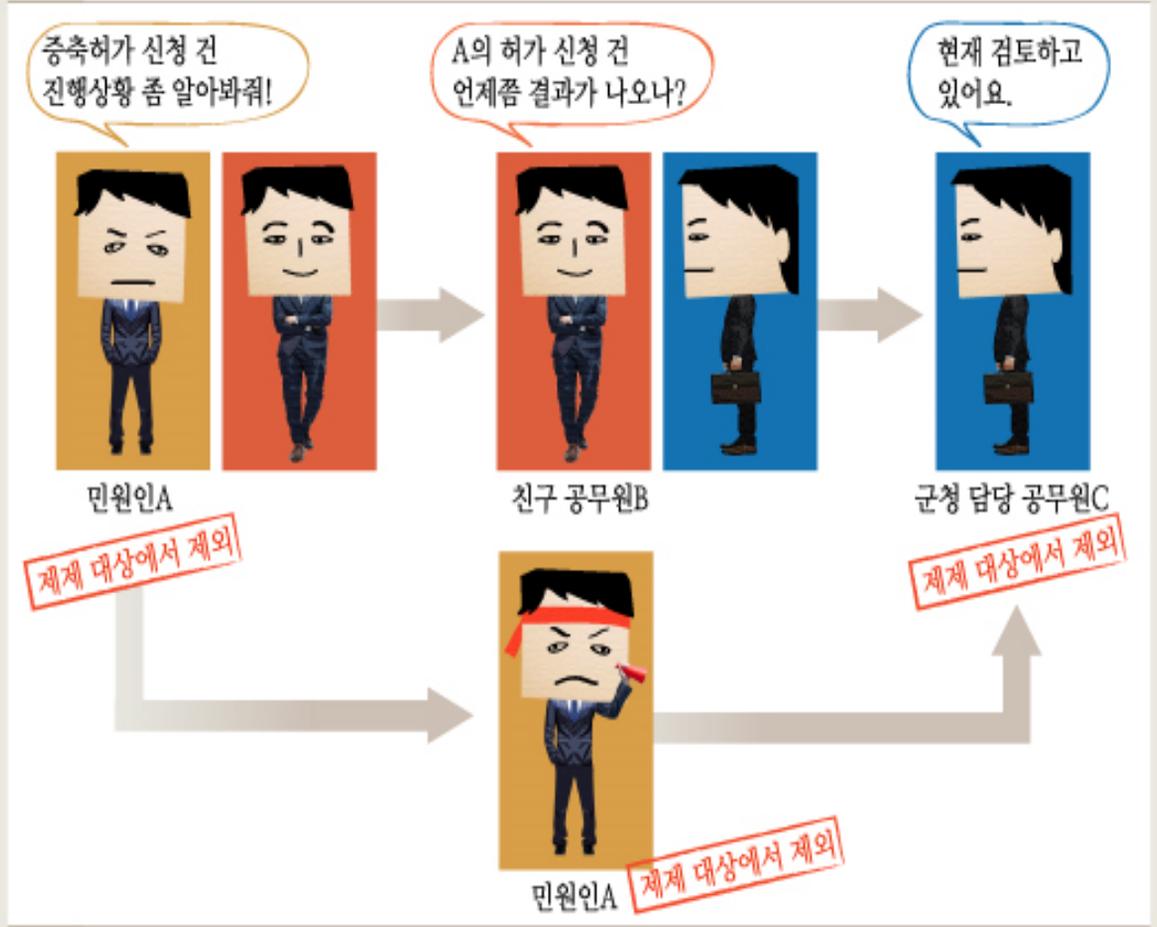
**변수** 이해당사자(A)의 민원이 다수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부정청탁 아님

예)제도의 미비함으로 인해 A와 같은 고충이 발생하고 있을 경우 B는 이를 전달하고 개선점을 건의할 수 있음

## "어떻게 돼 가나요" 경과 확인은 'OK'

[청탁금지법abc] 상)부정청탁편④

### 유형 경과 확인 및 공개적인 요구 행위



**변수** 공개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기본적으로는 처벌 대상 아님. 다만 공개적인 절차를 거치더라도 사전에 불법적인 비공개 청탁이 있었다면 문제가 됨.  
 예)정부 부처의 민원 담당 부서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의하는 경우.

## "우리 아들 취업 좀" 부탁만 해도 '불법'

[청탁금지법abc]상)부정청탁편⑤

유형 인사 부정청탁



**판정**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

공직자: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일반인: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변수** 인사과장 C가 일반 사기업 간부였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자녀가 아니라 배우자일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3

역사 속의 청렴이야기 (이원익)

무수한 업적보다 빛나는 것은 이원익의 청렴한 삶, 그 자체다. 한 나라의 재상으로 5번씩이나 영의정을 재임했으면 대궐 못지않은 으리으리한 집에서 하인을 거느리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의 소탈한 성품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퇴임 후에 이원익은 초라한 초가집에서 스스로 농사짓고 돛자리를 만들어 팔아 생활하였다.

이원익  
李元翼



이원익 초상화

(정복 차림의 영정. 40대 무렵의 작품으로 18세기에 모사한 모사본이다.)

출생 1547년 12월 5일  
조선 경기도 금천현 서면  
사망 1634년 2월 26일 (86세)  
조선 한성부

##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청백리

충현관을 나오면 최근 복원된 풍욕대(風浴埕), 삼상대(三相臺) 정자를 만난다. 밑동 굵은 소나무와 어우러진 정자에서는 조선시대 선비의 담백한 옛 풍류도 엿볼 수 있다. 정자를 지나면 관감당으로 이어진다. 관감당은 인조가 이원익에게 하사한 집이다. 인조는 존경하는 이원익이 초가집에서 사는 것이 몹시 안쓰러웠던 것이다. 이원익이 극구 사양하자 인조는 "경을 위하여 집을 지어 준 것은 백성과 신하들로 하여금 느끼는 바가 있게 하려 함이요" 라고 하여 이원익의 고집을 꺾을 수 있었다. 관감당 앞에는 탄금암(彈琴岩) 바위와 400년 수령의 측백나무가 어울려 한국의 전통 정원(庭園) 같은 시원한 풍경을 선사한다. 탄금암은 이원익이 앉아 거문고를 튕겼다고 전해지는 바위다. 나무 그늘이 내려온 바위에 앉으니 마음이 편안해진다

세상 사람 중에 형제가 화목치 못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부잣집에서 그러하다. 이는 재물이 있으면 다들 마음이 생겨 천륜을 상하게 하니 재물이 바로 빌미가 된다는 것을 알겠다. 자손들은 절대로 옳지 못한 재물을 모으지 말고 불인(不仁)한 부(富)를 경영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농사에 힘써 굶어 죽는 것을 면하면 옳을 뿐이다.

이원익의 유서 중에서 자손들에게 남긴 말이다. 평생 재물을 모으지 않았던 자신의 소신이 잘 드러나 있다. 욕심이 없어 그런지 이원익은 88세까지 장수했다고 한다. 가냘픈 몸에 후덕한 인품을 가진 이원익의 정치적, 육체적 장수의 비결은 청렴함과 도덕성에 있다.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청렴한 청백리를 꼽는데 이원익의 이름을 빼놓지 않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누가 이원익을 차마 속일 수 있겠는가?

○ 2016. 7. 14. 청렴서한문 발송

- 우리 사무소와 계약체결한 87개 사업 수행업체에게 청렴서한문 발송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홍인기입니다.

우선 지면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 불안정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사무소에서 발주한 국도유지 보수공사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일선 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귀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범정부 차원의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등 부패 요인 제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되지만,

아직도 일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식사 등 향응 및 금품수수 등의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신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사무소 전 직원은 이권개입, 알선·청탁 등의 금지는 물론 과거의 관행들을 과감히 근절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하고 투명한 국토교통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국민에게 한 걸음 다가서는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무소 직원들의 실천의지도 중요하지만 건설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의 협조 또한 '부패율 제로(0%)'라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공무원행동강령' 과 함께 그동안 시행되고 있는 청렴관련 시책들이 차질없이 실천되어 우리의 다짐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귀사 소속 공사현장 종사자는 물론 하도급사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부패가 없고 깨끗한 건설문화 정착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특히 휴가철을 맞이하여 금품수수 등의 불미스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도, 평소 느끼신 생각이나 개선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적극 개선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사무소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과 공사관계자들의 열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항시 귀사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14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홍인기 올림

○ 2016. 7. 22.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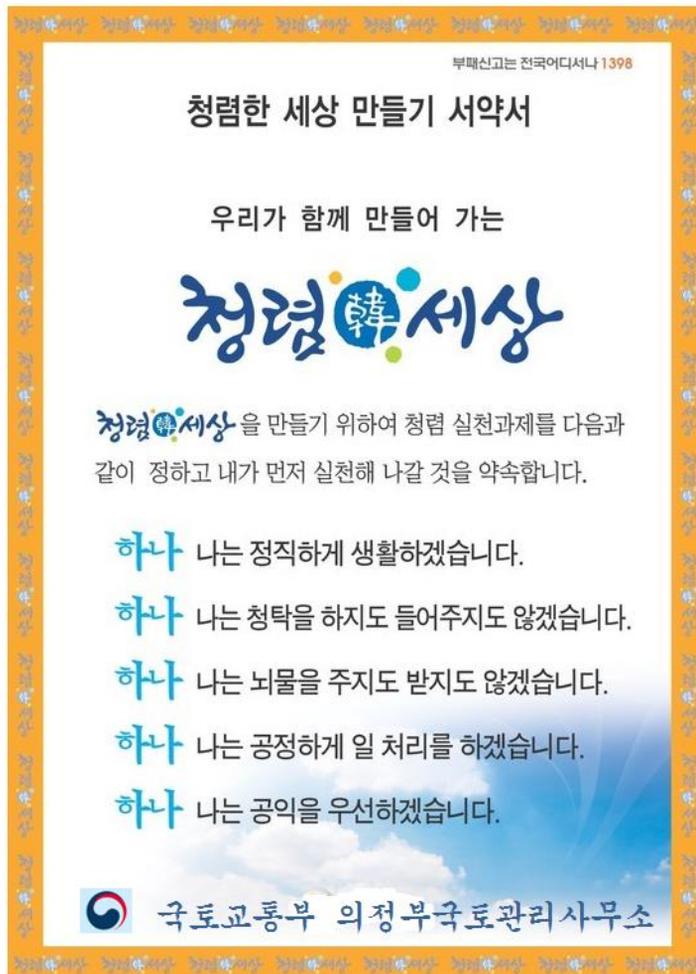
- 일시/장소 : 2016.07.22.(금), 10:00 ~ 11:30 / 2층 대회의실
- 청렴교육
  - .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 민원교육
  - . 민원인 개인정보취급 주의 안내
  -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시 준수사항」 개정내용 안내
- 참석대상 : 우리 소 직원 28명



○ **2016. 8. 3.**

내부직원 업무용 PC에 청렴 화면보호기 설치

- 개 요 : 우리 사무소 내부직원 업무용 **PC에 청렴한 세상 만들기 서약서**를 화면보호기로 설치한 후 각 개인이 이를 숙지하여 실천함으로서 우리 사무소 직원의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부패신고는 전국어디서나 1398

### 청렴한 세상 만들기 서약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 청렴한 세상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청렴 실천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내가 먼저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 하나 나는 정직하게 생활하겠습니다.
- 하나 나는 청탁을 하지도 들어주지도 않겠습니다.
- 하나 나는 뇌물을 주지도 받지도 않겠습니다.
- 하나 나는 공정하게 일 처리를 하겠습니다.
- 하나 나는 공익을 우선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2016. 9. 1. 우리 소 청렴워크숍 실시

### □ 개요

- 일시 : 2016. 9. 1.(목) 10:00~16:00
- 참석 : 우리 사무소 직원 26명

### □ 주요 내용

- 소장님 주재 청렴 교육(우리 소 2층 상황실)
  - 부정 청탁의 금지행위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기준
  - 청탁금지법 Q&A 및 적용사례
  - 신고 및 처리절차 등
- 청렴 캠페인 실시(국도43호선 의정부시 만가대 사거리)
  - 청렴 관련 플래카드 및 피켓 홍보
  -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금품·향응 금지, 부정 청탁 금지 등
  - 팸플릿 배포(청탁금지법 및 부패공익침해신고 안내 ☎1398 등)
- 청렴 유적지 탐방(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소재)
  - 청렴문화 체험 교육을 위한 다산 공·렴(公廉) 아카데미 참가
  - 다산 정약용 선생 묘소 참배 및 생가 방문, 목민심서 특강 등



소장님 주재 청렴 교육



청렴 캠페인 <플래카드 및 피켓 홍보>



청렴 캠페인 <전단지 배포>



다산 정약용 선생 묘소 참배



다산 정약용 선생 생가 방문



특강 '다산과 목민심서'

## 2016.9.7. 공사현장 점검 및 청렴 캠페인 실시

### □ 추진배경

- 우리 사무소에서 시공하고 있는 건설공사 현장의 부패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공사현장 점검 및 청렴에 대한 시민 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 실시

### □ 개요

- (일시) '16.9.7.(수) 14:00 ~ 15:30
- (장소) 국도45호선 남양주 화도 삼봉리 위험도로 개선공사 현장
- (참여) 청렴도 향상대책반, 청렴도 향상실무단, 청렴지킴이 등

### □ 주요내용

- 공사현장 점검
  - 공사현황 및 시공상태 모니터링
- 청렴 캠페인 실시
  - 공직사회 청렴 관련 플래카드 게시 및 피켓 홍보
  -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직무관련 금품·향응 금지, 부당한 이권개입 및 청탁 금지 등
  - 팸플릿 배포(청탁금지법 및 부패공익침해신고 안내 ☎1398 등)



공사현황 브리핑



공사 현장 점검



청렴 캠페인 <플래카드 게시 및 피켓 홍보>



청렴 캠페인 <전단지 배포>



팸플릿 내용(앞)



팸플릿 내용(뒤)

○ 2016. 9. 29. 청림 마일리지 우수직원 포상

- 일시/장소 : 2016.09.29.(목), 10:00 / 2층 대회의실
- 내용 : 2016년 청림 마일리지 운영계획에 의거 각 청림  
 활동마다 참여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인센티브  
 제공
- 기간 : 2016. 1. 1~ 9. 30
- 청림 마일리지 우수자 현황

순위	부서	성명	마일리지	비고
1	구조물과	이흥구	22	최우수
2	보수과	우경찬	21	우수



○ 2016. 9. 29. 청렴도 향상 대책반 간담회 실시

- 일시/장소 : 2016.09.29.(목), 13:00 ~ 14:50 / 2층 대회의실
- 참석 : 1명(소장, 대책반 위원\*, 청렴지킴이 등)
  - \* 대책반 위원: 내부 3명, 외부(위촉) 4명
- 주요내용
  - . 2016년 청렴도 향상 추진 실적 보고 및 평가
  - . 청탁금지법 시행 대책 및 주의사항 논의
  - . 건설공사 부조리 방지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 논의



5

청렴 선진국 수범 사례

1

국가청렴도 1위, 뉴질랜드의 청렴 국회의원

- 중대비리조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의 활약
- 1988년 설립된 불법 정치자금이나 부패 또는 사기사건 등을 전담하는 정부. 의회로부터 독립된 반부패 기관
  - 위법행위 혐의자 뿐 아니라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에 대한 문서제출, 정보제공, 답변 요구권 보유
  - 수사방해, 기록의 파기. 은폐, 수색에 대한 저항은 범죄행위로 기소할 수 있으며 실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
  - 중대비리조사청 직원은 법원의 영장 없이 비리혐의자, 제3자, 민간기관에 대해 비리 조사에 필요한 협력 요청 가능

□ 부패에 대한 무관용 (Zero Tolerance) 정책

○ 공직사회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지위고하 등을 고려한 관용을 베풀지 않음

<< 관련사례 >>

■ 2004년 지방 시찰 중이던 헬렌 클라크 前 총리는 업무 수행 중 과속을 하여 이를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 전 국회의원이자 각료를 역임했던 타이토 필립 필드는, 2008년 불법 체류자인 태국인에게 불법비자를 발급해 준 대가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집수리 등을 시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뉴질랜드 정계 사상 최초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박탈

2

가장 행복한 나라 1위, 북유럽의 청렴국 덴마크

□ 국회의원들의 높은 청렴도

○ 청렴하고 탈권위적인 국회의원들이 덴마크 국회의 상징

- 의전차량이 없어 국회의사당에 별도의 주차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함
- 국회의사당 정면 현판에는 이(齒), 귀, 머리, 위(謂)가 아픔을 의미하는 '사통(四痛)' 조형이 있어 국민을 생각하는 건강한 정치를 하라는 메시지를 던져줌

- 언론과 사법기관의 부패 감시 공조체제
- 덴마크의 부패사건은 대개 언론기관에 의해 적발됨
  - 언론기관은 '고발기자(investigative journalists)'라는 특수분야 기자를 양성하여 부패문제를 고발
  - 언론에 의해 부패관련 사건이 알려지면, 사법당국은의 예외 없이 수사를 통해 진상 확인하고 다시 언론을 통해 결과 공표

### <<관련사례>>

- 2009년 한국을 방문한 덴마크 대법원장 멜치어는 "2008년 실시한 법원의 여론조사에서 국민 94%가 법원에서 받은 서비스에 만족하며 법원 판결을 신뢰하고 있고, 패소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절대 다수가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았다' 라고 답했다" 며, 이는 "뇌물수수나 부정부패가 없는 공공행정에 대한 높은 신뢰가 법원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기 때문" 이라고 말함.

□ 철저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 1766년 「출판언론자유법」 제정을 시초로 '행정의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 는 원칙을 21세기 세계 70여 개국에 전파

- 의회·행정·사법 자료 뿐 아니라 공직자의 이메일 등도 '공식 기록' 으로 규정하여 시민청구 시 공개

※ '교회세' 를 이유로 교회총회 전반의 재정 및 운영 상황도 정보공개 대상

- 자의적 비공개 남발을 막기 위해 1982년 「기밀보호법」을 제정, 명확하게 기밀로 규정된 사항 외에는 빠짐 없이 공개토록 함

□ 공직비리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무관용

○ 뇌물을 주기로 약속만 해도 이메일, 전화통화 등 증거가 있으면 범죄로 기소할 수 있음

○ 비리에 연루되거나 뇌물을 주고 받은 당사자가 공무원인 경우 처벌이 강화됨

#### <<관련 사례>>

■ 전 스웨덴 부총리 모나 살린은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조카에게 줄 기저귀와 초콜릿, 식료품 등 생필품 2000크로나(약 34만원)어치를 공공카드로 구입한 사실이 정보공개 과정에서 밝혀졌음. 그는 이후 자기 돈으로 카드대금을 메워 넣었음을 항변하였으나, '정부와 국민의 돈과 개인 돈을 구별하지 못한다' 는 여론의 강한 질타로 결국 부총리직에서 낙마함.

6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사례 1

부당한 명절선물 구입 및 제공 지시의 수행

모 공직유관단체 직원 A 등은 지역본부장 B의 지시로 지역본부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선물을 구입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관계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본부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지 않고 그대로 따름

⇒ 업무관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가족의 가게에서 물품을 구입하도록 한 지역본부장 B는 물론이고, 상급자가 명백하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음에도 거부나 상담절차 없이 해당 지시를 이행한 직원 A 등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임

## 사례 2

### 용역사업 수행 중 이해관계 직무회피 불이행

모 대학 A교수는 국제공항의 방수공사 공법 선정을 위한 용역(7천만원)을 甲건축학회로부터 의뢰받아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법 선정' 공고 결과 9개 업체가 응찰하였고, 그 중에는 자신의 처가 등기이사로 있는 乙업체도 포함된 사실을 인지함. A교수는 이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 등과 상담하지 않고 선정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乙업체가 제시한 공법 및 내용을 심사하면서 최고 점수를 부여하여 결국 乙업체가 낙찰되도록 함

⇒ 공무원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의 직무관련자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등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 등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 따라 소속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결함으로써 행동강령을 위반함

### 사례 3

### 손실보상 안내공문에 특정 세무사 소개

모 군청 해수욕장 경영사업소 직원 A는 관내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기간동안 영업을 못하게 되어 생긴 손실을 보상받을 대상자 848명에게 군청과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도록 안내하는 문서를 발송하였는데, 공사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을 입증할 근거서류 준비와 관련, 안내문에 해당 사업 추진위원회 민간위원이자 동향 후배인 특정 세무사의 이름과 사무실 전화번호를 명시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무사에게 직접 문의 및 상담하도록 하는 문구를 삽입함

⇒ 안내공문 등에 특정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인 (업체)을 표기하는 행위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위반임. 다만, 모든 관내 세무사의 사무실 전화번호 등을 일괄하여 안내문 등에 별첨하여 보낸 경우에는 위반이 아님

**사례 4**

법인카드로 업무 관계자들에게 선물 제공

모 교육청 장학사 A와 모 고등학교 교감 B는 인근 식육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목적 외의 용도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받고 쇠고기(포장)를 구입, 업무 관계자들에게 제공

⇒ 본래의 집행목적 외의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임